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20호

##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본 한·미동맹: 누구를 위한 한·미동맹인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I. MH, MB와 한미동맹
- II. 2+2 회담과 한국과 미국의 국익 : MD와 한미일 동맹
- III. 한국의 MD체제 가담의 어리석음
- IV. 한미동맹의 반중화와 한미일 3각동맹화의 어리석음
- V. 동북아 상생·공영에 적합한 한미동맹이 되어야

### I. MH, MB와 한미동맹

이명박정부는 여중생 미군장갑차압사사건 여파로 반미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등 한미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했다. 4년여가 흘러 지난 6월 14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를 추구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12일 뒤 국무회의에서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통과시켰지만 여론의 못매를 맞고 서명절차를 연기하기도 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이따금 오해를 살만한 정치·외교적 발언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가 한미관계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정상화하여 서로에게 이로운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애호하도록 만들려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를 ‘반미’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는 호혜성이 보장되는 올바른 한미관계가 튼튼한 한미동맹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명박정부 집권 말에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한국 국민의 대미 감정을 개선시켰으므로써 한미동맹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을까? 간단히 답변하면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할 나위 없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국익은 위태롭고 위축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국 국민은 몇 개 국제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자부심을 느끼긴 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존재이유인 확고한 대북 억지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오히려 후퇴했고 유형 무형의 부담은 커지고 있어 불만을 낳고 있다. 북핵문제도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이미 군사도발을 감행한데다 추가 무력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을 수정하고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고순도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고속증식로를 유지하여 핵무장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일본의 오만한 억지와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를 용인한다는 듯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중용과 일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한일간에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로 중국이 한국을 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진영의 전위병쯤으로 여기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미국은 이명박정부의 친미정책을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 민주당 정부의 마일동맹 이탈 동향을 저지하였으며, 반테러전쟁과 이란 제재에도 한국의 협력을 활용하였다. 한국은 막대한 미국 군수물자를 구입하고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도왔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추종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동북아에 신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중 적대진영의 첨병 역할을 부여받았고 북한과의 군사적 정면충돌 위험이 상시화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인들은 역사상 가장 좋은 한미관계를 맺고 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어 번영을 모색하기 보다는 생존이 위협받는 안보위기를 타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이명박정부가 대미일변도 외교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운용한 결과, 한국의 비용과 부담은 급증했지만 국가안보는 위태로운 상태에 처함으로써 미국인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 II. 2+2 회담과 한국과 미국의 국익 : MD와 한미·일 동맹

지난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전술한 것처럼 한미동맹이 미국에게는 세계전략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중견국으로서의 자부심은 주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부담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상

황도 평화 회복이나 북핵문제 해결,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남북한 대립과 동북아 신냉전 질서에서 한국의 반중진영 가담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준다. 한마디로 구한말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한반도가 미·중의 충돌장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먼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활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기대되었는데, 양국 장관들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침묵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국가안보 부문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MD체제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되는 과정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한·미·일 3국간 반중동맹 결성 움직임의 기정사실화이다.

### Ⅲ. 한국의 MD체제 가담의 어리석음

먼저 한·미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는 사거리 연장, MD체계 구축 뿐 아니라 미사일 탐지, 식별, 타격, 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는 것인데 이는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미국의 MD체계로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는 (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 체계이므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고, 정부 당국자도 “미국이 정보, 탐지 등의 분야에서 측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MD와 독립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요격미사일의 명중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간 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불과 3-4분 만에 수도권을 가격하므로 아무리 MD체제가 우수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최소 7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1시간 동안에 17,000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장사정포를 6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늘에서 막아내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북한이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감행할 동기 자체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와 적극성을 가지고 대화 및 협상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전해올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요격하기보다는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방어무기

보다 공격형 무기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3,000km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한국은 30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화해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도록 적어도 800km까지는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MD만 합의했다고 하니 회담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MD체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자국 방어에는 유용한 MD체제의 전방 관측기지만 요격체제를 한국 내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칫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는 별 쓸모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방어에만 유용한 무기체제를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여 갖추고 이로 인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정면 대립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

#### IV. 한미동맹의 반중화와 한-미-일 3각동맹화의 어리석음

2010년 서울 한미 2+2 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과 비교해볼 때, 이번 공동성명은 내용도 2배 정도로 늘어나 양국 간 협력부분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반테러전쟁, 대이란 제재, 핵안보정상회의 등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한국이 지원하는 내용들이다. 양국 장관들은 중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인 인도와의 대화, 협력 및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 간 당사국 행동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한국 정부가 꾸준히 견지해온 한미동맹의 반중화 역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양국장관들이 한미동맹을 한-미-일 동맹 구축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합의하여 한국이 반중진영의 일원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장관들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한-미-일 안보 토의를 비롯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회의 심의나 여론 수렴 없이 국무회의에서 그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용해오고 일본이 간절히 바라던 한-일-미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로 통과시킴으로써 이명박정부가 임기 초부터 조용히 모색해오던 한-미-일 동맹의 기반 구축 의도가 드러났다.

물론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당마저 대선을 의식하여 이의 보류를 요구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자 정부가 협정 체결을 연기하였지만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재추진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물론 세계무대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일본은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일 반중동맹을 결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한일동맹 체결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향후 상당기간동안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현명하겠지만 한일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전략 수행에서 미국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중국의 협력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의 방해까지 감수하겠다는 무모한 행위이다.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핵문제 해결, 북한 급변사태 대비, 평화통일 등을 원활하게 달성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중 교역량이 한일과 한미 교역의 합을 능가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남기게 해주는 우방국임을 감안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그간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도 외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나 압박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편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이 중일관계에서 일본편임을 명백히 한다면 전술한 중차대한 국가전략 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은 고사하고 한·중관계 악화로 엄청난 국익 손실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우리의 우수한 신호정보와 인적정보를 얻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 있는 정보를 일부 보장하는 정도이므로 큰 실익이 없다. 게다가 이 협정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MD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크므로 정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 수호를 위해 한일간 협정 체결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사가 있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중국과도 동일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 V. 동북아 상생·공영에 적합한 한미동맹이 되어야

정부가 합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무모하게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의 첫발을 디디려다 여론의 못매를 맞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된 배경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얽매어 탈냉전 시대의 복합적 국제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합리적인 국가전략관이 결여된 데 있다. 또한 미국이 월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체

제와 정책에 대해 반성하면서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냉전적인 사고로 중국의 부상을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포위압박하기 위한 동아시아 신냉전 질서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을 그 전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쇠퇴하게 만든 네오콘식 일방주의를 답습하여 ‘불량한’ 북한정권이 핵 개발을 강행하고 군사도발마저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한 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명분삼아 과잉 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 구입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무모하게 한미일동맹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오히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 화를 자초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중이 대립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향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냉전적인 사고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청산하고 정부가 임기 초부터 천명한 것처럼 북한과 명실공히 상생하고 공영하는 정책을 펼쳐 권력 승계 과정중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호혜적인 경협을 재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억지와 군사적 대결 준비에 모든 국가 과제들을 종속시키는 비합리적인 고비용 안보 지상주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남북 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노력과 예산의 일부라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투자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 정책목표들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북정책의 해답은 빈틈없는 대북 억지 안보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호혜적인 협력도 성실하게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미동맹을 물신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맹목적인 친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증진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을 유발하여 한·미동맹의 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한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주요 국가목표인 한국의 안보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평화통일 기반 구축,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우호적인 한·중관계 유지 등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는 것보다 화해와 협력, 윈윈(Win-Win) 기조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국가들의 상생·공영을 도모



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동맹을 결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장 삼가야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제로섬게임과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동맹정책을 넘어서서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견지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그 길은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2012/07/02)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